

전문가 “철근누락은 법 부재 문제… 감리 시스템 손봐야”

(GTX 삼성역)

더불어민주당 긴급 좌담회

한국 건설 품질관리 등 한계 지적
안전 컨트롤타워 부족 ‘도마 위’
부실시공 공개 의무 등 대책 필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긴급 전문가 좌담회를 열어 사태의 원인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전문가들은 이 자리에서 ‘서울시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6·3 지방선거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사실상 ‘오세훈 서울시장’의 실정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국토교통·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좌담회를 열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좌담회에 참석해 “전문가분들께 들었는데 SOC 해체 관련 법이 대한민국에 없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다. SOC 해체 관련 법 부재 등 우리의 실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됐다. 당장 해야 할 일부터 중장기적으로 해야 할 일까지 점검해보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토위·행안위 주최로 열린 전문가 긴급 좌담회 ‘서울의 안전 이대로 괜찮은가?’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철근 누락 사태에 대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 일상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며 “최근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잇따랐다”고 지적했다.

천 원내수석은 “서소문 고가 붕괴 역시 사고 12시간 전 이상 징후가 발견됐는데도 별도 안전 조치 없이 안전진단을 진행한 것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가

시공사가 제출한 해체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고 말했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와 제도 공백을 지적했다. 또 안전·위기관리 컨트롤 타워 설치, 전문 인력 참여 지원, 감리 시스템 보완 등을 주문했다.

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을 지낸 박두용 한성대 교수는 배근팀·협력업체·원도급자·감리 등 4종 관리 시스템이 있었음에

도 철근 누락이 발생한 점을 들어 “한국 건설 시공의 품질 관리에 하나의 문제점이 드러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교수는 서소문 사고에 대해서도 문제가 발견돼 공사가 중단됐음에도 차량·열차 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데 대해 “국가의 안전 관리 체계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제화 등을 통해 공공 공사의 경우 부실시공에 준하는 것이 발견됐을 때는 반드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국가 안전 관리나 위기관리 체계는 굉장히 상위층에서 작동돼야 되고, 그것을 모니터링하고 컨트롤 할 수 있는 타워가 필요하다. 서울시에도, 국가에도 필요한 것 같다”고 했다.

이현우 토목구조기술사회 회장은 “인프라 시설물 철거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구조물에 대한 전문 기술자, 특히 구조 기술자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삼성역 철근 누락도 마찬가지다. 전문 기술자들이 양성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선 제도적인 전문 건설업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조성일 르네상스정책연구원장은 철근 누락에 대해 “시공사의 단순 실수라기보다는 우리 건설 공사 시스템이 현재 제대로 기능을 안 한다는 측면에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며 “(한국의) 감리 시스템

이 글로벌 스탠다드와 많이 동떨어져 있다. 근본적으로 손을 볼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안상로 한국안전리더스포럼 회장은 “SOC 시설물은 관련 법이 없다. 그래서 별도의 법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며 “AI, 드론 등 첨단 장비를 (점검 방식에) 활용하고 도입할 수 있는 기반 조성과 어떤 형태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예측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이날 비공개 좌담회를 마친 뒤 “서울시의 안전 불감증, 시스템 붕괴에 대해 다들 우려하면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며 “서소문 고가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골든타임을 분명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지적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또 “SOC 사업 관련해 시공사라든지 여러 업체들의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징벌적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도 주셨다”며 “(철근 누락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해 작성돼야 할 시공 상세 도면이 없었던 것 아닌가, 만약 있었다면 이런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들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개헌 성사 못해 아쉬워… 후반기 국회 결실보길”

우원식 국회의장 퇴임 기자회견

국회기록원 설립 등 과제 95% 달성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개헌이 성사되지 못해 정말 아쉽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헌 특위를 구성하고 결실을 볼 수 있도록 언론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퇴임 기자회견을 열고 개헌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국민의힘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민주이념의 헌법 전문 명시 등이 담긴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분회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가 미달돼, 투표가 불성립됐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 정쟁의 수준이 너무 격해지고 있어서 걱정이다. 39년 만의 개헌 기회를 문 앞에서 놓친 것도 그 여파”라며 “진영 나누기가 자리 잡은 환경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며 미소를 짓고 있다. /뉴시스

을 비롯해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을 풀어나가면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 정치하는 보람이라고도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개헌과 관련해) 새롭게 큰 흐름은 만들었다. 국민투표법을 개정

해 절차적 걸림돌을 해소했고, 성사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했다”며 “국민적 합의가 높은 것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개헌에 국민적 공감대도 넓어졌다”고 했다.

또 우 의장은 임기 중 선과에 대해 “임

기를 시작하며 의욕적으로 세운 계획이 있었는데 역점과제를 94.9% 달성했다”며 ▲12·3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 수호·현정질서 회복 ▲의회외교 통해 대외신인도 제고 ▲헌법 제1조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헌법 제1조를 새긴 국회의사당 정문 등 국민주권 정신을 국회공간서 구현 ▲국회 기록원 설립 ▲2035 탄소중립 로드맵 마련 등을 꼽았다.

또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 생명안전기본법, 가맹사업법 등을 거론하면서 “22대 국회 전반기 법안 처리율 30.2%는 국민께서 보기엔 부족한 성적표지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의미 있는 성과가 적지 않다”고 언급했다.

우 의장은 “그러다 보니 국회의장 중립에 대한 여러 말씀도 있었다”며 “단약 중립을 여야 양편 가운데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국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갈등의 중재자이자 조정자로서 역할을 넓혀야 한다. (저는) 국회 사회적 대화로 그 일을 본격화했고, 노사 5단체가 전부 참여해서 제도 밖 노동자의 보호 방안을 도출했다”며 “이러한 성과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더 확대돼야 한다.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를 법제화하는 국회법 개정이 후반기에는 꼭 매듭지어도 록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국회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민심의 방향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에서 국회의장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임기 초에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말씀을 드렸다. 평의원으로서 돌아가서도 ‘태도와 문화로서의 민주주의’의 상을 실현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억울한 꼴 당하지 않는 민주주의 너머의 민주주의, ‘국민의 삶으로 입증되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기우제를 지내듯 마침내 이루어낼 때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李 “공공부문 안전 문제 심각… 지위고하 막론 엄정 책임”

“안전보다 돈 중시하는 관행 여전
관계 기관, 신속하게 진상 규명”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우리 사회 일각에는 안전보다 돈, 안전보단 효율을 중시하는 그런 못된 관행이 여전하다”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 사고,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 역시 이런 병폐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35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승강장에서 홀로 작업하던 청년 노동자가 열차

에 치어 숨진 구의역 참사, 오늘 10주기고 한다”며 “그날 이후에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가장 안전해야 될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가슴 아픈 일이 반복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민의 관심과 현장의 노력 덕분에 올해 1분기 산재 사망자가 크게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사망자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사고와 삼성역 GTX 철근 누락 문제를 언급하며 “특히 이 사건들은 누구보다 국민 안전에 앞장서야 할 공공 부문이 관련됐

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 기관은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이 최근 지역에서 행사를 참석한 후 인근 전통시장을 방문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왜 시장에 밥 먹으러 갔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며 “원래 저는 시장에서 밥 먹는 걸 좋아하니 좀 이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최근에 행사 끝나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주로 식사를 시장에서 하면서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다”면서 “민생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면 국민 일상과 관련된 전통시장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가 수출을 중심으로 강

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골목상권에는 아직 그 온기가 충분히 전해지지 못하고 있다”며 “시장에 가면 여러 사람 얘기를 듣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개선도 안 되고 계속 악화하고 있는 것 같다. 아케이드나 간판 같은 시설 개선과 안전시설, 노후시설 정비 수요도 많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전통시장이 살아야 또 골목과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 균형 있는 경제 성장도 우리 사회의 모든 지역, 모든 영역, 모든 부분이 함께 성장할 때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며 “전국의 전통시장을 하나로 연결하는 온라인 유통 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유통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서예진 기자